

Ⅵ.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17.6%에서 2050년에는 72.0%로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그 결과 노후소득 확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개인 책임의 상당 부문은 근로기간 중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될 것이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측면이 축적된 자산을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 연금전환 필요성,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정책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정부 또는 연금기금에서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의무 연금전환과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칠레,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연금전환 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스위스에서는 연금기금에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연금지급률을 매우 높은 수준(7.2%)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연금전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구체적으로 연금전환을 디폴트옵션으로 제시하는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일임할 때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전환에 대한 선택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일임하는 미국 DC와 호주에서는 연금전환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이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불충분한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을 통해 보완(대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시금 인출 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잔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연금전환의 대원칙 및 제1안으로서 정책 효과가 가장 높은 의무 연금전환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불충분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화 정책이 요구된다. 적용 대상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 한정한다. 의무 연금전환 정책에서는 연금전환이 최적이지 아닌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기대여명이 매우 짧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예외를 인정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제2안으로서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는 의무 연금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모색할 수 있는 차선택이다. 디폴트 연금전환 정책은 의무 연금전환 정책과 달리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도입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의무화 방안보다 정책 효과가 낮고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일임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연금전환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제3안은 현 상태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이는 의무화나 디폴트옵션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검토할 수 있으며 가장 소극적 방안이다. 따라서 연금전환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3가지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전부 연금전환 정책에 따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동 방식은 적립

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연금전환하는 데 따른 심리적 저항과 연금 과잉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것이다. 개별 지급방식과 상품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어 이들 상품을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부분 연금전환 방식은 프로그램인출과 연금상품을 결합한 다양한 혼합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연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 관련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입자들이 종신소득흐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며, 연금전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적인 가격비교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되어 2010년 12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29조 원을 초과하고 가입자도 240만 명에 이르는 등 외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급단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제도의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연금전환 정책을 위해 의무 연금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구체적 대안으로 부분 연금전환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적정 연금전환 수준 및 연령, 예외 조치 요건, 개인들의 지급옵션에 대한 구체적 선택 행위 분석 등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